

I. 총 평

- 우리 충청북도는 1980년 준공된 대청댐과 1985년 준공된 충주댐 등 2개의 다목적댐이 건설된 지역입니다.
- 댐건설로 인하여 수도권을 비롯한 관련지역의 생활용수 전량 공급, 홍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국가 물관리 경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반면
- 댐 인근 주민의 재산권의 문제,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세 수입원의 감소
- 수질보호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운영비 등 재정부담
- 각종 규제에 의한 개발억제 등으로 댐주변 지역 주민의 생활권에 큰 영향을 받고 있어
- 댐주변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과 주민지원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1년 8월 23일 11명의 위원으로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왔음
- 댐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충주, 단양, 보은 지역에서 특위위원과 시민단체, 환경단체, 학계, 지역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댐건설로 인한 피해상황과 애로 건의사항 등을 청취 하였으며

- 대청댐, 충주댐 건설로 인한 지역 주민의 일방적인 희생의 강요 저지와 지역 발전의 걸림돌 해소를 위한 주민동참, 협조 유도, 홍보 차원에서 CJB, KBS, MBC, CBS 대담방송에 참여 특위 구성배경, 운영계획, 중점추진 내용 등을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 댐 운영 이익금의 전액 피해지역 환원, 댐운영 지역참여 보장, 물이용 부담금의 합리적 배분, 피산댐 확대건설 철회, 차별화 되고 불합리한 물정책의 개선 등을 요구하는 내용의 물권리찾기 범도민 서명운동을 전개하였으며
- 충주·대청댐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사회, 경제적 피해사례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밀 조사, 연구, 분석, 검토하여 경제적 가치로 환산 국가적 보상 내지 지원 유도과 지역균형 발전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댐주변지역 피해조사 연구소요 용역비 3억원중 1억 5천만원을 2002 당초예산에 계상 한바 있습니다.
- 지난 10개월동안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로 적극적이고 의욕적인 특위 활동결과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댐주변지역 피해 조사연구 추진 등 앞으로도 댐주변 지역 주민들을 위한 지원시책 등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II. 주요 활동일정

◆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설치

- 2001. 8. 23. 제1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구성 : 11명(이광종, 심홍섭, 박종기, 이근성, 박노철, 이길하, 황태모, 유동찬, 장준호, 김대호, 권영관)
- 활동기간 : 2001. 8. 23 ~ 2002. 6. 30

◆ CJB, KBS, MBC, CBS 대담방송 - 이광종, 이근성

- 8. 25 KBS 청주 충북패트룰
- 8. 26 CJB 일요초대석
- 8. 27 CBS 지방시대
- 10. 7 MBC 초대석

◆ 댐특위 간담회(충주지역)

- 2001. 8. 29 특위위원, 학계, 시민단체, 주민 참석

◆ 댐특위 간담회(단양지역)

- 2001. 9. 10 댐특위위원, 군의원, 시민단체, 지역단체, 군관련 공무원, 주민 참석

◆ 댐특위 간담회(댐특위 위원회실)

- 2001. 9.18 댐특위위원, 학계, 환경연합, 관련 공무원 참석

- 댐지역 피해조사 연구용역비 계상(2002년 당초예산)
- 댐특위 자문위원 위촉 협의
- ◆ 특위위원과 의장단 연석회의(의장실) - 2001. 10. 16
 - 댐주변지역 피해조사 연구용역 계획 설명
 - 용역비 및 2002년 당초예산 계상 협의
- ◆ 댐특위 간담회(댐특위 위원회실) - 2001. 10. 26
 - 댐주변지역 피해조사 연구 용역비 예산 계상과, 과업수행 담당은 집행부, 의회는 지도, 감독토록 협의
- ◆ 물권리찾기 범도민 서명운동
 - 2001. 9. 26 제193회 임시회 종료후 전도의원 대상서명
 - 2002. 11. 1(단양읍)
 - 댐특위원과 단양군의원, 시민단체, 환경단체 참석
- ◆ 댐특위 간담회(보은지역)
 - 2001. 11. 15 댐특위위원, 지역주민 참석

Ⅲ. 주요 활동내용

◆ 대담방송(CJB, KBS, MBC, CBS)

○ 내용

-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구성 배경

- 댐건설로 수권권 및 댐인근 지역의 주민에게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홍수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국가 불관리 경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반면,
- 댐인근 주민의 재산권의 문제,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세 수입원의 감소
- 수질보호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운영비 등 재정 부담
- 각종 규제에 의한 개발억제 등으로 댐주변 지역 주민이 생존권에 큰 영향을 받고 있어
- 댐주변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과 주민의 지원 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

-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운영계획

- 댐관련대책 추진 민간단체와의 간담회 및 주민여론 청취
- 각종 댐관련 활동자료 수집 등을 통해 내실있는 특위활동 전개

-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중점 추진내용

- 댐건설 및 주변지역의 지원 대책
- 댐운영 이익금의 지원 확대
- 광역상수도 정수시설 국가부담을 위한 수도법 개정
- 대청호 및 충주호 수질보전 대책
- 상수원 보호구역 관련 대책
- 상류지역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 매립장 설치, 관리비 중앙정부 부담과
- 금강대책 및 금강법 추진 등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불편사항, 건의사항 등을 폭넓게 수렴하여 심도 있게 분석·확인·검토하여 댐주변 지역주민들에게 합리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댐특위 현지 간담회

< 충주지역 >

○ 내용

- 댐특위위원, 시민단체 간부, 학계와 상건례
- 댐주변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과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댐특위 활동방향
- 댐주변 지역의 직·간접 피해사례 정밀조사와 체계적인 분석을 위한 용역
- 댐주변 지역 지원 사업비의 타시·도 비교 균형배분 대응
- 물이용 부담금의 합리적 배분 방안 강구
- 상류지역 청정도 계량화 차등지원
- 하류 수혜지역 물이용 부담금 증액, 상류지역 지원사업 확대
- 타·시도와 연대 대책위 조직 대정부 건의 지속

< 단양지역 >**○ 내용**

- 도내 시·군 및 타시·도 환경시민단체와 네트워크 구성
- 댐관리 운영에 따른 수익금의 합리적 배분 및 정보공개
- 수도법 개정(광역상수도 설치비 국가부담 등)
- 물이용 부담금의 합리적 배분
- 수중보 설치 외국사례 수집
- 단양 댐지역 주민의 피해조사 등 백서 발간
- 댐특위와 시·군의회, 시민단체와의 유기적인 공조체제 유지
- 제내지 경작 금지 조치 유보
- 충주호 수위 조정지댐(수중보) 설치
- 폐기물 처리장 조성사업비 지원
- 댐 저수구역 제내지 개발
 - 신단양 별곡 4단지 고수부지
 - 단성면 소재지 앞 고수부지

< 보은지역 >**○ 내용**

- 수질보전을 위한 각종 규제로 경제활동 위축 및 지역발전 걸림돌 해소 방안 강구
- 댐주변 안개일수 증가로 병충해 발생, 건조불량 등 영농장애 대책
- 일조시간 부족, 냉해피해 증가 등 자연환경과 기상 변화에 따른 농업 생산량 감소 대책

- 물이용 부담금의 합리적 배분으로 상류지역 지원 내실화
- 댐주변 지역의 직·간접 피해사례 정밀 조사와 체계적인 분석을 위한 용역
- 수변구역 지정시 주민 피해 최소화 대책 마련

◆ 불권리찾기 범도민 서명운동 전개

- 2001년 10. 26 제1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종료후 전도의원 대상 서명운동
- 2002년 11월 1일 단양군 주민을 대상으로 서명운동 전개

< 불권리 찾기 내용 >

- 물이용 부담금의 합리적 배분
- 댐운영 이익금 전액 지역 환원
- 세내지 친환경농업 허용
- 보안림 지정 철회
- 댐피해지역 댐운영 참여권 보장
- 수도법 개정
- 수리권 지역 환원
- 안정적인 수위 유지 방안 마련
- 괴산댐확대, 달천댐 건설 반대
- 남한강 환경 관리청 중복 설치
- 환경 교부금 지원
- 수도권 공장 총량제 강화 수자원 용량에 맞는 개발

◆ 댐지역주민 피해조사 연구용역

○ 내용

- 충주, 대청댐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사회, 경제적 피해사례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정밀조사 연구분석 검토하여 경제적 가치로 환산 국가적 보상 내지 지원 유도 및 지역 균형 발전 기초 자료로 활용
- 과업명(가칭) : 대규모댐 건설로 인한 지역환경과 경제에 끼치는 영향 연구
- 과업 수행기간 : 2002 ~
- 연구방향
 - 댐건설에 따른 환경학적 변화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
 - 댐으로 인한 지역주민에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영향
- 과업의 범위 : 충주, 대청댐 유역 대상
- 연구방법 : 충주 대청댐 구분 연구원 편성 환경, 사회, 경제, 법률 분야 검토 연구

※ 세부조사 내용

- 충주댐 및 대청댐 건설로 인한 편익
 - 용수공급
 - 홍수피해 감소
 - 전력 생산
- 한강 및 금강수계의 환경변화
 - 댐건설로 인한 수질변화
 - 댐건설로 인한 기상변화

- 기타 환경변화
- 환경변화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충주댐 및 대청댐 건설로 인한 각종 변화
- 인구 및 토지의 감소
- 도로 두절 및 교통불편
- 이농으로 인한 휴·폐경지 발생
- 지역개발 제한
-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영향
- 축사시설 규제에 따른 영향
- 지역경제의 상대적 정체
- 토지이용 규제에 따른 지역개발 위축
- 중소기업활동의 제재
- 대형건축물 입지 제한
- 기타
- 지역경제의 상대적 정체
- 환경 및 금강수계 물이용 부담금의 합리적 배분 방안
 - 수계관리기금의 내용분석
 - 주민지원사업비 배분상의 문제점
 - 물이용 부담금의 합리적 배분방안
 - 주민지원 사업비 합리적 집행방안
- 기타
- 종합분석 및 검토

- 소요예산액 3억원 중 1억 5천만원 2002당초예산 계상
1억 5천만원 추경확보 후 시행

◆ 도정질문시 댐주변지역 지원촉구

(제198회 제2차 본회의 3. 20 이광중 의원)

- 댐피해지역 조사연구 용역비 증액편성
(당초 1억 5천→ 4억으로 증액)
- 댐관련 전담부서 신설 및 전담인력 보강
-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의하면 특별대책 지구에 91%의 건설비와 운영비를 지원, 일반대책 지구에는 건설비와 운영비를 각각 70% 지원하고 있는바 상류지역에는 적은 지원 속에 규제와 단속은 강화되고 있는 등 비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대책 강구
- 한강수계 관리기금 및 주민지원 사원비 배분방식의 불균형으로 상류지역 피해확산, 물부담금 중 댐 상류지역 지원에 대한 불합리한 부분 대책 강구

IV. 첨부자료

1. 댐관련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2. 물권리찾기 범도민 서명운동 관련서류

1.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

위원장 이 광 종 의원 (관광건설, 단양 1)

간사 심 홍 섭 의원 (관광건설, 충주 2)

위원 박 종 기 의원 (기획행정, 보은 2)

이 근 성 의원 (기획행정, 옥천 1)

박 노 철 의원 (교육사회, 청원 2)

이 길 하 의원 (교육사회, 제천 2)

황 태 모 의원 (교육사회, 청주 2)

유 동 찬 의원 (산업경제, 옥천 2)

장 준 호 의원 (산업경제, 영동 1)

김 대 호 의원 (산업경제, 괴산 1)

권 영 관 의원 (관광건설, 충주 1)

지역차별 국민차별 하는 물 정책 바뀌어야 합니다!

댐이 있었을 때 자유롭게 하천을 이용했는데 국가가 일방적으로 거대 콘크리트 댐을 만들어 놓고 물 이용하려면 허락을 받고, 물 마시려면 돈을 내라고 하니 얼마나 해피망측한 일입니까? 댐건설 전에 누렸던 자유로운 물에 대한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만일, 이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국가는 불합리한 물 정책을 개선하고 물 수혜지역은 합당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유권자수가 수도권이 많다고 하여 충북, 강원만 희생시키는 것은 차별정책입니다. 정당한 물 권리를 찾기 위해 충북도민과 양심적인 국민이 함께 나섭시다.

운동목표

● 물이용부담금인상 / 주민지원사업비배분방식개선

▷ 서울, 인천, 경기일부지역 주민이 내는 물이용부담금은 현재 톤당110원으로 충북, 강원지역의 현실적인 피해를 보상하는 285원으로 즉각 인상되어야 합니다.

▷ 주민지원사업비 684억원(2000년도)중 97%인 6백50억원을 경기도, 충북83천만원, 강원67천만원 지원하는 것은 정작 물 피해를 보는 충북, 강원도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입니다. 팔당댐만 피해가 있고 충주댐은 피해가 없나요?

● 댐이익금 전액지역환수

800억원(2001년도)에 이르는 막대한 충주댐 이익금중 수자원공사의 피해지원금은 14억5천만원(충주6억, 제천45천, 단양4억)에 불과 합니다. 댐운영을 위한 최소지출을 제외하고 이익금은 전액 댐피해지역으로 환원되어야 합니다. 또한 충주댐에서 발생한 이익을 다른 댐지역에 지원하는 것은 충북도민을 우롱하는 것으로 즉각 시정되어야 합니다. 이제 물장사는 충북이 합시다.

● 수도법개정 / 광역상수도 점수시설비 지방비부담액 환원

▷ 수도법(52조의2)개정전 수도권과 부산시 등 재정자립도가 높은 자치단체는 정수장 건설비를 전액 국비로 지원했으면서 법을 개악하여 충주댐, 대청댐Ⅱ 광역상수

도의 정수장시설비를 지방비로 부담시킨 것은 지역차별입니다. 이 나라는 대도시 시민만을 위한 나라입니까?

· 부담액 대청댐 청주시 497 / 청원 45 / 오송신 133
(억원) 충주댐 충주시 174 / 음성 85 / 진천 49 / 괴산 10 / 증평 38

▷ 정수시설비를 내고 정수처리된 물값을 이중부담토록 한 것은 [빵 짚는 기계비용도 내고 빵도 사먹으라는 것과 같은 파렴치한 짓입니다. 국가가 충북도민을 이렇게 차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댐위원회설치 / 댐운영 지역참여보장

정부는 댐과 관련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각 댐마다 [○○댐 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기구는 댐 운영(건설)기관, 댐 피해 자치단체와 의회, 생태·문화·사회·환경전문가와 관련 시민단체가 참여해야 합니다. 여기서 댐 건설 계획·과정·관리·해체 등 댐과 관련한 일체의 내용을 총괄해야 한다. 댐피해지역도 당연히 댐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충주호, 대청호는 국가의 자원인 동시에 지역의 자원이기 때문입니다.

● 괴산댐 재건설 반대

▷ 건교부는 달천댐 건설이 충북도민들의 저항으로 좌절되자 그 상류의 괴산댐을 무려 10배(총저수량 1530만톤 → 1억 3980만톤)로 확대하려고 합니다. 이는 불과 한 달전에 [달천댐 건설을 하지 않겠다]는 공문약속을 뒤집는 충북도민 기만행위로 교묘하게 달천댐 건설을 강행하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 괴산은 그동안 달천댐 건설논란으로 주민갈등이 일어나고 경제적인 휴유증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댐확대를 발표하여 지역민들을 고통과 혼란 속에 몰아넣는 정부가 국민의 정부입니까?

▷ 환경친화적인 수자원 확보 방법을 소홀히 하고 물부족량을 과잉산정하여 댐건설의 논리를 극대화시키려는 건교부와 댐건설해야 생존하는 수자원공사의 조직이기주의입니다. 충북도민은 더 이상 희생양이 될 수 없습니다.

● 수질·수량관리 환경부로 일원화

광역상수도과 다목적 댐 건설은 전교부, 수질관리는 환경부, 은천은 행자부, 농업용수는 농림부, 수력발전소와 산업단지 공업용수는 산자부가 관리주체입니다. 물정책에 대한 견해차, 부처이기주의, 중복투자, 업무혼란 등으로 효과적인 치수정책이 입안될 수 없습니다.

● 남한강관리청 증설설치

한강수계가 금강 영산강에 비해 원통히 넓고 이용인구 또한 2,500만명을 넘는 만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북한강 관리청은 강원도에 남한강관리청은 충북에 분리설치해야 합니다.

● 수계관리 일원화

문장대·용화은천 개발예정지가 낙동강수계였다면 상주시가 그토록 개발에 집착을 보였을까? 영산강관리청에서 관리하는 금강발원지와 대구청에서 남한강발원지는 각각 금강·한강관리청으로 관리권이 이양되어야 합니다.

● 환경교부금제정

댐주변 자치단체는 인구감소와 각종규제로 세수익이 감소된 만큼 국가는 환경교부금을 통하여 이를 보전해 주어야 합니다.

● 제내지 환경농업허용

댐 건설 이후 단 한번도 침수되지 않은 제내지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댐피해 농민을 위해서도 수질오염을 하지 않는 농법으로 경작을 허용해야 합니다.

댐이익금 피해지역으로 환원하라!! 댐운영 지역참여 보장하라!!
 광역상수도 지방부담금 환원하라!! 괴산댐 확대건설 철회하라!!

충청북도의회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 물권리찾기충북도민연대

T 380-080 충북 충주시 방방동 341-13 한국녹색연구소내

F 019-477-6117 e-mail : green1kr@hanmail.net

후원금 : 농협329-01-462248 예금주 : 충북물권리

불합리한 물관리 정책 올바르게 바꿉시다.

중주댐 관련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넙하류지역인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의 생활용수공급, 홍수피해방지, 농업용수공급, 발전용수 등 국가경영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상대적으로 맑은 물을 공급하고 국가정책에 부응하고 있는 상류지역 단양은 어떻습니까?

각종규제와 피해로 생활불편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재산권 침해 등 생존권은 물론 날로 침해되어가는 지역경제로 인구감소가 극심하여 군존립 조차 위협받고 있습니다.

댐 건설과정이나 운영에서 부득이 하게 댐상류지역의 피해가 예상되고 발생된다면 이에 상응하는 직결한 보상과 지원대책을 마련하여 어느지역에 살든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보장받을 권리를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임에도 규제법률은 강화되고 댐 건설시 약속은 전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군민여러분!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산다고 각종수혜만 입고 댐 유역주민에게는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규제와 피해만 강요한다면 누가 수질을 보전해 가며 농촌지역에 살겠습니까?

중주댐으로 인한 최대피해지역은 단양입니다.

온갖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고 감수하면서 정직한 보금자리 희망있는, 살기좋은 비전의 땅으로 가꾸기 위해 불합리하고 잘못된 물관리 정책의 개선을 촉구 하고 우리군민의 정당한 물권리를 찾읍시다.

운 동 목 표

- 연간 2,600억원이나 징수하는 물이용 부담금의 합리적 배분입니다.

물이용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서울, 인천, 경기일부지역 주민이 내는 물이용 부담금이 댐으로 인해 수혜없이 고통만 받고 있는 상류지역에 골고루 배분되지 않고 오히려 한강수질을 오염시키는 경기지역에 99.99%배정되고 충북지역은 유일하게 충주만 0.01%도 채 안되는 18억여원만 배정될 뿐 맑은물을 하류로 내려 보내고 있는 단양은 수도권에서 연간 2,600억의 부담금을 징수하면서도 단 한푼도 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군민여러분!

한강유역의 규모나 길이로 보아 최소한 2,600억원의 30%인 800억원은 충북에 배정되고 이중 30%인 240억원은 단양지역에 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맑은 물을 지키기 위한 고통과 피해 보상적 차원의 수혜자 부담금이 합리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합니다.

● 댐 이익금 전액 지역 환수입니다.

충주댐은 연간 800억원의 막대한 이익금중 불과 14억 5천만원(충주6억, 제천45천, 단양4억)만 지원합니다.

충주댐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고통과 피해받고 있는 댐주변지역에 소액만 지원하고 다른 댐지역에 지원하는 것은 군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처사로 즉각 시정되어야 하며 댐운영을 위한 최소지출비용을 제외하고는 이익금을 전액 댐피해지역으로 환원되어야 합니다.

● 수몰지내 경작지(제내지)농업허용입니다.

수자원 공사는 내년부터 수몰지내 경작지에 대해 전면 경작금지를 실시한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수몰지내 경작지는 수질오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으며 오히려 경작을 금지할 경우 부유물 등으로 인해 수질오염이 가중될 것이며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댐 피해 농민을 위해서도 친환경적 경작을 허용해야 합니다.

● 보안림 지정 철회입니다.

댐 양안 5km의 국공유지 보안림 지정은 군면적의 87%에 달하는 산림이용권을 제한하는 조치로 즉각 철회되어야 합니다.

댐 건설로 좀더 나은 생활과 발전이 있다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단 양 범 군 민 추 진 위 원 회
물권리 찾기 충북도민연대